투잡 기본, 쓰리잡·포잡까지… 돈벌이에 의정 직무 남얘기

광주지방의원 겸직 사각지대

시의회·5개 자치구 의원 92명 중 53명 겸직 신고
28.3%가 보수 받아… 쓰리잡 7명·포잡 의원도 2명
당선이후 취·창업 8명 "의정은? 비직무 저버리나"

제9대 광주시의회와 광주 5개 구의회 의원 92명 중 절반이 넘는 53명이 겸직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의원 10명 중 3명은 겸직 활동을 통해 보수를 챙기는 이른바 '투잡' 의원이었다. 의원직을 포함해 무려 '포잡'을 뛰는 의원도 2명이나 됐다.

이들 의원 중 8명은 지방선거 당선 이후에도 취업을 해 기업체에서 근무 중이거나 직접 회사를 차리는 등 수익 활동에 나선 사실도 확인됐다.

23일 광주시의회와 광주 5개 구의회가 공개한 의원 겸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92명의 의원 중 절반이 넘는 53명(57.6%)이 99건의 겸직을 신고했다.

의원들이 겸직 신고를 한 업체의 성격과 의회사무국에 제출한 신고서 내용 등을 토대로 보수 유무를 분석한 결과 겸직 신고를 한 의원 가운데 절반 수준인 26명(49.1%)이 보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전체 의원 수 대비 28.3% 수준에 달하는 것이다. 광주 지방의원 10명 중 3명은 겸직 활동을 통해 수익을 얻고 있다는 의미다. 26명 중 25명의 소속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었다.

의원직을 포함해 2개의 수익 활동을 하고 있는 이른바 '투잡' 의원은 17명이다. '쓰리잡'을 뛰고 있는 의원도 7명이나 됐다.

'포잡' 의원도 2명이다. 의장이 운영하는 업체의 직원으로 입사, 계약 수주를 위해 뛰어 논란을 일으킨 서구의회 김형미 의원을 비롯해 북구의회 한 의원도 기업체 대표와 부동산임대업 등 3건의 겸직 신고를 했다.

특히 김 의원처럼 의정활동 중 취·창업에 나선 의원도 8명에 달했다.

김 의원은 올해에만 전승일 서구의회 의장이 대표로 운영 중인 공연기획 업체와 북구 소재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와 공연기획 관련 회사에 각각 기획실장과 기획이사로 재직, 자신이 직접 창업을 하기도 했다.

이처럼 기존 손해사정 회사를 운영하던 서구의회 A의원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법무법인 회사에 사무장으로 취직했다. 남구의회 B의원은 올해 8월 전남 담양 소재 화물자동차 운송업체 본부장으로 입사, 재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북구의회에서는 C의원이 지난해 2월부터 금융회사에서 일하고 있고 D의원은 지난해 2월 개인 부동산 임대업으로 2건의 겸직 신고를 했다. E의원은 기존 개인 기업체와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하다 2023년 또 다른 주식회사를 창립했다.

광산구의회 F의원은 보수는 받지 않는다고 했으나 지난해 광산구 소재 한 제조기업 대표로 재직한다는 내용이 겸직 신고를 하기도 했다.

광주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하기보다 돈벌이를 위해 겸직에 뛰어들면서 유권자가 부여한 직무를 저버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류봉식 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유권자가 부여한 직무를 맡은 지방의원들은 공공의 의무를 충분히 인식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할 필요가 있다"며 "성실한 의정활동이라는 본분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권철 기자

오피스텔 운영난에 보증금 날리나

첨단 오피스텔 사업 운영자 공석·운영난에 멈춰
입주민, 공실 몫 부담… 관리비 7만원→24만원
'대금미납' 외벽·가구에 유치권 현수막 걸려 공포

광주 한 오피스텔 사업이 운영난의 이유로 1년 가까이 멈추면서 입주민들의 전세사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입주민 대다수가 청년층인데다 급격히 오른 공실 관리비까지 분담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3일 광주 광산구 등에 따르면 지난해 중순 지역 한 오피스텔 시행사 운영자가 돌연 공석이 되면서 입주를 시작한 첨단 지역 A오피스텔 사업이 멈췄다.

사업이 멈추자 A오피스텔 입주예정자 30여 명은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입주를 하지 못했다.

미리 입주한 38가구는 운영 주체의 공석 등으로 인해 2년 계약 만료 이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이들 일부는 국토부에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신청을 했지만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임대인을 대신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일반전세지킴보증도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입주민 대부분이 학생·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이라 계약 만료 이후 재산 피해 막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보증금 문제 뿐만이 아니다.

오피스텔 절반 이상이 공실을 차지하면서 관리비가 3배 가까이 뛰었다. 입주 초기 월 7~8만 원 관리비를 내던 주민들은 미입주 60가구의 몫까지 분담하면서 월 24만 원까지 내는 상황이다.

시공사측은 시행사로부터 수십억 원대 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건물 외벽과 각 가구에 유치권 행사 현수막을 걸었다. 이러한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는 입주민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A오피스텔 입주자 B씨는 "관리비가 치솟으면서 경제적 부담이 크게 늘었고, 주거 공간에 유치권 행사 현수막까지 걸리면서 주민들은 하루하루 불안에 떨고 있다"며 "보증금 반환을 포함해 입주민의 안전과 관리가 존중받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했다.

현재 해당 시행사가 시공·운영한 첨단과 동명동 지역 오피스텔 입주민은 250명 이상으로 추산한다. 경찰도 임대인을 상대로 낸 전세사기 관련 고소장을 접수 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오피스텔 입주민들은 광주시·광산구·광산구의회 누리집에 호소문을 내고 "입주민들은 전세보증금 미지급·관리비 폭등·공용 전기세 차단·건물 시설 문제 등 생존권과 직결된 심각한 경제·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광산구는 입주민들의 사정을 고려, 피해자들의 안정적인 주거 확보·실질적 구제를 위해 전세사기피해자법 특별법 유효기간을 연장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또 시공사에 오피스텔 외벽에 걸린 불법 현수막 자진 철거를 요청했다.

박해원 광산구의원은 "입주민 대다수가 학생·사회초년생이지만 임대인의 경영 어려움과 미흡한 계약 절차로 추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며 "문제해결을 위해 지자체·국토부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오덕근 기자

학생 꿈·희망 지원 교육복지정책 확대

광주교육청, 꿈드리미·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

광주교육청이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보다 촘촘히 지원하기 위해 교육복지 정책을 확대한다.

2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학생의 심리·정서적 어려움과 학교생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처음 시작한 꿈드리미 교육비 지원사업을 통해 중3학년과 고3학년 학생 중 다자녀 가정·저소득층·다문화가정·탈북민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1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했다. 바우처는 수학여행비·현장체험학습비·졸업앨범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사업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5662명 가운데 96%가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96%가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올해 꿈드리미 사업 대상을 중 2·3학년, 고 2·3학년 학생으로 확대해 더 많은 학생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습과 생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26년까지 모든 중·고등학생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광주희망사다리재단을 통한 복지정책도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다. 재단을 통해 지난해까지 101명의 장학생을 지원했으며, 23가구의 공부방 환경을 개선했다. 저소득층 고 3학년 학생 755명의 석식비를 지원하는 한편 다문화 가정 학생 부모 고향 방문, 학교로 찾아가는 다문화 예술극장 등을 운영했다.

올해는 아동복지시설 학생 지원, 사회적배려 학생 지원, 미래인재 육성, 교육가족 문화체험소통의날 운영 등 4개 분야의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이 밖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각각 10만원과 30만원씩의 입학준비금을, 졸업예정자에 대해서는 1인당 6만원의 졸업앨범비를 지급했다.

시교육청은 내·외부 협력을 강화해 학생맞춤 통합지원 사업 운영을 고도화하고,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해 총 120개교에 지원할 계획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학생들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해 학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교육청·학교·지역사회가 원팀이 돼 맞춤형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학생 보호망을 견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염선호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쉽사리 잡히지 않는 의성 산불 있다. 경북 의성군 산불 발생 이틀째인 23일 의성군 의성읍 한 야산에 산불진화헬기가 산불 진화에 나서고 /뉴시스

실효습도 40% 미만 '건조'… 광주·전남 산불 등 화재 주의

바람도 강해 불씨가 큰 불 이어질 수 있어

경남 산청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한 가운데 광주·전남도 건조한 날씨가 이어져 화재에 주의가 필요하다.

23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주요지점 실효습도는 전남 광양 37.3%, 광주 조선대 38.3%, 구례 성삼재 38.4%, 여수산단 38.6%, 순천 40.5%, 장흥 관산 41.6%를 기록 중이다.

광주와 전남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풍이 지속적으로 불고 있으며,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고 있다는 게 기상청의 설명이다.

기상청은 당분간 전남동부를 중심으로 대기가 건조,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이 대기가 건조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광주기상청 관계자는 "건조하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겠다"며 "휴일 등산객과 나들이객은 야외활동 시 산불 등 화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민규 기자